

달러화 예금 넉달째 감소세 이어가

“12월 거주자외화예금 589.1억 달러... 전월 대비 21.4억 달러↓”... “지난해 전년 대비 3.8억 달러↑”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 예금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달러화 예금 감소 영향으로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589억1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1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넉 달만에 하락 전환한 거주자 외화예금은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지난해 거주자외화예금은 달러화 예금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의 감소(-25억8000만 달러)에서 3억8000만 달러 증가로 전환했다. 달러화 예금이 24억1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위안화 예금은 33억3000만 달러 줄어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화별로는 12월 말 기준 달러화예금 잔액이 23억7000만 달러 줄어든 496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 달러화예금은 410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9억6000만 달러 줄었고, 개인 달러화예금은 4억1000만 달러 줄어든 86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의 달러화 예금이 줄어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이어가자 기업들의 무역대금 결제 및 원화 수용 대응을 위한 예금인출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달러화 예금이 많이 늘었다가 지난해 9월 이후 달러화 강세가 시작되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료화 예금은 증권사의 대기성 투



설 맞이 인기제품 16일 서울 신설동 한국도자기리빙 전시장에서 직원들이 리빙한국과 리한의 인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자금 및 기업 서비스로 지급을 위한 예금 예치 등으로 전달 보다 1억 6000만 달러 늘어난 29억6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유료화예금은 지난 6월 국내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을 위한 인출 및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영향 등으로 9억 달러 급감한 27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의 영향으로 5억

4000만 달러 증가한 32억7000만 달러를 기록,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위안화예금은 대기업의 무역대금 결제 위한 예금 예치 등으로 전월 대비 1억4000만 달러 늘어난 13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지난 2014년 10월 217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급리 차이 등에 따른 차익거래 유인이 사라지면서 10억 달러대까지 규모가 줄었다.

엔화예금은 전월 보다 1억4000만 달러 늘어난 3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엔화 증권발행 및 자금의 예금 예치 등으로 증가했다.

영국 파운드 및 호주달러 등 기타 통화예금은 2억1000만 달러 줄어든 13억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은 18억 달러 감소한 48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3억4000만 달러 줄어든 102억3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뉴스

‘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막자’

김해영, 보험법 개정안 발의... 지급 전 보험금 설명 의무화 추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의 종류를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낳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전 보험금의 종류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만 부과돼 계약자의 알 권리가 충족

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미지급 문제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고, 이를 어긴 보험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과징금을 강제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뉴스

도내 서남권 설 상여금 ‘지난해와 비슷’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김적우)는 2017년 설 연휴(1.27~1.30)를 앞두고 관할지역(정읍·김제읍·고창읍·부안)에 있는 10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공장가동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설 연휴 휴무기간은 4일 휴무가 75.0%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 휴무를 뺀 3일 휴무가 25.0%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동안 공장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90.0%)가 가동하지 않는 반면 10.0%의 업체는 설비 유지(7.0%)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3.0%) 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급한다는 업체가 75.0%, 지급 안한다는 업체가 25.0% 나타났으며, 그 이유

에 대해서는 연봉제 실시(20.0%)와 자금부족(5.0%) 등의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급 대비 50% 지급한다는 기업이 95.0%로 가장 많았으며, 100% 지급은 2.0%, 기타 20~40% 지급도 3.0%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설 체감 경기를 묻는 질문에 73.0%의 기업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작년 같은 질문에 68.0%가 악화됐다고 응답한바 있다.

이에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비율이 작년(70.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작년보다 제조업 체감경기가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낮은 금리’로 돈 빌려 연체 없으면 신용등급 안떨어진다

금융위, 불합리 제도 개선... 신용정보부족자 신용등급책정에 ‘우량정보’ 반영 등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7년 업무상세보고 브리핑을 열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평가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떨어트렸다.

앞으로는 대출기관과는 상관없이 ‘얼마의 금리’로 ‘얼마나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결정된다.

6%대 이하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IBK저축은행 ‘참~좋은돈’

6.2% ▲TT친애저축은행 ‘원더풀슈퍼와우론’ 5.9% ▲SBI저축은행 ‘U스마일’ 5.9% ▲SBI저축은행 ‘사이다’ 6.9% ▲신한저축은행 ‘허그론’ 6.2% ▲웰컴저축은행 ‘웰컴대출’ 5.9% 등이다.

위 상품을 이용하며 연체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고신용자들은 신용등급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단, 무이자 30일 상품의 경우 이자를 내지 않는 기간에 대한 ‘약정금리’가 적용돼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신용정보과 관계자는 “30일

무이자의 경우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27.9%의 약정금리로 계약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며 “저축은행에도 6%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했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년 등 신용정보부족자의 신용정보 신용 불이익 해소를 위해 통신이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입내역 등 우량정보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 동안 신용정보부족자는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돼 대출금리 등

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회사는 또 소비자의 대출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 완화를 위해 신용 스코어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스코어제도는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1000점 만점으로 책정해 점수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스코어제도 도입을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 일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뉴스

통신요금 실적으로 대출받는 ‘텔코스코어’ 개발

LG유플러스

금융거래 실적 없이 통신요금 이용 실적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G유플러스는 NICE 평가정보와 국내 최초로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텔코스코어’를 공동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텔코스코어는 NICE 평가정보를 통해 금융기관들에 서비스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통신 빅데이터를 분석 요약한 통신 평가항목을 NICE 평가정보에 제공하고, NICE 평가정보는 제공받은 통신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 등급화 작업 후 금융기관에 제공한다. /뉴스

대출 등의 목적으로 은행을 찾는 LG유플러스 고객들은 금융거래실적이 부족하더라도 텔코스코어를 통해 통신사를 이용하면서 축적한 가입상품 정보, 요금납부 실적 등의 통신 이용 실적으로 신용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텔코스코어를 KB금융그룹과 제휴해 출시한 통신·금융 융합 플랫폼 서비스 ‘티브 메이트’의 KB국민카드 대출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텔코스코어를 대출한도 우대정책에 활용해 텔코스코어 점수가 높은 LG유플러스 고객에게 금융우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